

# 경기둔화·고물가...전남도, 조기추경으로 민생 활력

## 본예산보다 6782억 증액 총 13조 3805억 지역경제 회복·인구위기 극복 등에 집중

전남도가 경기 둔화와 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대응해 6782억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과 인구 위기 대응, 미래 산업 전환, 그리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4일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위기와 저출산 극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한 2026년 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7023억원에서 6782억원(5.3%) 증가한 13조 3805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445억원(6.2%) 증가한 11조 1032억원, 특별회계는 137억원(1.1%) 증가한 1조 2492억원, 기금은 200억원(2.0%) 증가한 1조 281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체감'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658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63억원을 증액했다. 투자기업 지원사업 59억원,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 3억원 증액 등 기업 투자와 창업 생태계 보강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농수축산 분야 지원도 확대했다.

버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반영해 재배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북 양식어가 보충 지원 확대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도 담겼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106억원을 신규 투입해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농업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농업 분야 AX 혁

신기반 조성에 85억원을 편성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예산도 눈에 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367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50억원을 확대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청년센터 및 청년마을 활성화 8억원,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 27억원 증액 등 청년 정책도 보강했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이민의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원 증액, 한국어 배움터 운영 1억원 신규 반영도 포함됐다. 난입 시술비 지원 10억원,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6000만원 증액 등 저출산 대응 사업도 이어간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은 22억원 확대했다. 사전 불입 행사, 전남 홍보관 운영, 섬 반값 여행,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등을 반영하고, 랜드마크 조성 및 시설 안전관리·도로 정비 등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94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순천문화콘텐츠 3호 펀드 5억원 신규 출자, K-Art 청년창작자 지원 7억원도 포함됐다.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RISE 사업 94억원, 글로벌대학 집중육성 40억원, 돌봄어린이집 운영 6000만원 증액 등 저출산 대응 사업도 이어간다.

여수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04억원 등을 확대 반영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HD현대사호 사전구매 약정식.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4일 전남도청 접견실에서 김재을 HD현대사호사장, 김종기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 약정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대학 내달 출범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대학이 다음 달 출범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을 앞둔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와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장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관련 명칭과 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다음 달부터 통합 출범하는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로 교명을 정했다. 글로벌 해양 특성과 대학을 목표로

두 대학 결합 모델을 제시해 지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선정됐고 이후 통합 대학에 박차를 가했다.

앞으로 국립목포대는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를 병행해 운영한다.

본교 격인 국립목포대의 도립캠퍼스는 4년제와 대학원 중심의 기술·인력 육성에 나선다. 담양캠퍼스는 2년제로 운영하며 기능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목포·남악·영암·나주·장흥캠퍼스에 사는 남도문화예술, 스타트업, 글로벌 오션 사이언스 등의 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전남 동일 생활권 연결 광역철도 구축 '속도'

### 전남도, 광주~나주·화순 광역철도, 최우선 현안 추진 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에타·기본계획 용역 등도

광주와 나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후속작업이 속도를 낸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도 광역교통 분야 최우선 현안으로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국가철도망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가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도 광역교통 개선사업(안)'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특례를 담아 통합특별자치 출범 이후에도 광역철도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

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도록 중앙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025년 8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특별광역연합 공동사무 제1호 안건으로 선정했으며, 10월엔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참여한 협의를 통해 노선을 광주 효천역 경유로 확정했다.

이후 해당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광주 상무역을 출발해 효천역~도시첨단단지~남평읍~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를 거쳐 나주역까지 총 연장 28.77km를 연결,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4600억원을 투입해 광주 소태역을 출발해 선교~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11.58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문일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도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략적 핵심사업이다"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광주 SRF 중단에 광역매립장 수명 6.5년 단축 시, 폐기물 100만 매립...운영사에 293억 손해배상 청구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의 비정상 가동으로 광역위생매립장의 수명이 6.5년 가량 줄어, 손해액이 300억원 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적이며,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전체 매립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제조시설을 설치,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썬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청정빛고을의 대표사는 시와 운영비 분쟁을 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다.

그러나 SRF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

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에 약 100만 t을 매립했다. 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인 306만t의 33% 가량을 차지하는 양이다.

광주시는 SRF 비정상 가동으로 단축된 광역위생매립장 사용 기간이 6.5년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매립장 조성비용과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해 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광주시는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자 수명이 한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의 대표사 포스코이앤씨와 광주SRF 운영비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측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4년 4월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3월 돌연 중재액을 2100억원으로 늘렸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대항상사원 중재심판은 지난 9월 9차 심리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9일 10차 심리가 진행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2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장서비

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을 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연합뉴스

## ▶1면 '통합특별법'서 계속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한 뒤 표결하는 방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절차를 고려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다음 달 2일께 표결 처리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행안위를 방문해 "오는 7월 1일 통합(지방) 정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6년 광주시가 전남도에서 분리된 이래 40년 만에 두 자치단체를 하나

로 통합하는 막바지 절차에 다다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통합특별시가 탄생한다.

통합특별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이 주어지며, 미래 산업의 전폭적인 투자 기회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당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행정통합지역에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4대 분야(△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활성화)에 걸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함께 법사위에 상정된 충남대전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이날 최종 의결에서 제외됐다.